

월요광장

빚더미 지자체 ‘육먹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나랏빚 615조 원, 지방자치단체 빚 34조 원, 가계부채는 1200조 원(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8.4%). 빚에 허덕이는 우울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의 부끄러운 통계들이다. 우리는 ‘빚 공화국’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6% 수준으로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125개 지자체(18개 시·68개 군·39개 자치구)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72조 원을 포함하면 지자체 부채는 100조 원이 넘어간다. 채무와 부채의 개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현재 시점의 빚이든 미래에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든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며, 바로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몫이다.

시흥시, 오산시, 이천시, 고양시, 부천시, 화천군, 고령군 옥천군, 영광군... 지

자체의 ‘빚더미 탈출기’가 보도되고 있다. ‘빚더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채무 0(제로)’를 선언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뜨겁다.

경남도 경우 지속적인 행정·재정·예산 개혁(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보조사업 재정점검·보지누수 차단·낭비성 예산 구조조정·체납 및 탈루 은닉세입 발굴·비율적인 기금 폐지 등)을 통해 도 재산한 정도 팔지 않고 1조3500억 원에 이르던 채무를 0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부리윤과 놀라움의 시선 속에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공공의료기관 폐업, 양성평등기금과 같은 사회기금 폐지,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 등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채무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이달 말부터 이른바 지자체 파산제라 할 수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을 조정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정 자치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뒤 3년간 개선되지 않거나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지자체가 대상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 매각과 같은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손쉬운 알짜배기 자산 매각은 장기적으로 재정 손실이 더 많을 수 있다. 또 지자체가 부채 감축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으로 흔히 꺼내드는 것이 지방세 인상이다. 몇몇 광역 지자체는 작년엔 주민세(개인 균등분)를 4500~4800원에서 현행법상 상한금액인 1만 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물론 주민세를 인상하면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 외면하기 아까운 카드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나 전임자 사업의 축소·폐지도 있을 수 있다.

지방세 인상과 자산 매각으로 채무를 줄이면 재정지표가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체장의 치적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실효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지자체장의 재선을 염두에 둔 선심 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과도 무관하지 않다.

공약 사업 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후 부채 절감에 매달려 정작 필요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악순환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빚이지만 미래에는 자산이 되는 좋은 채무도 있다. 악성 채무와 좋은 채무를 구분하지 않고 빚 갚기 열풍 속에 지자체의 미래를 도외시한 또 하나의 업적 쌓기는 분명 경계되어야 하지만 미래의 채무를 나 몰라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선심성 사업이 가장 경계할 대상이다.

우리 속담에 “천 냥 지나 천한 냥 지나 먹고나 보자”라는 말이 있다. 이와 크게 빚을 진 형편이니, 뒷일이야 어찌 되든 먹고 보자는 말이다. 먹을 때는 좋는지 모르나 결국 빚을 떠안게 될 젊은 미래세대만 죽어나는 것이다. 현재의 나와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뒷사람과 우리의 후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태도일 것이다.

공공성을 해치면서 재정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수치상 채무 제로 달성에만 치중하는 또 하나의 전사행정이라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미래 세대에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육먹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내실 있는 채무 제로화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는 우리 지역을 기대해 본다.

社 說

끊이지 않는 교사 채용 비리 근절책 없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가 또 터졌다. 고질병 해소를 위해 사정 당국이 엄벌 방침을 세우고, 공채 위탁까지 도입했지만 이를 비웃기도 하다. 수 억원대의 뒷거래를 했다든가 들끓어 난 것이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광주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이사 및 법인실장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억여 원을 받고 교사와 직원 9명을 채용했다. 법인실장 집에서는 가액의 수표와 함께 18억 원 상당의 금괴와 은괴까지 발견돼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친족관계인 학교 운영진들은 자녀의 취업 결정에 애태우는 부모를 통해서 돈을 받거나, 채용된 교사·직원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간제에서 정교사로 바뀌는 시점에서 돈을 주고받은 것을 보면 대가성이 확연하다 하겠다.

오간 금액은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 원으로 차이가 났다.

국·영·수 등 중요 교과에 따라 액수가 많아지고 행정실 직원의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등으로 차등을 두었다. 이처럼 교직 매매가 유행하는 바람에 실력을 갖추고도 끝내 좌절해야 하는 교사 지망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대부분 사립학교는 친인척들이 학교 운영권을 장악함에 따라 감시받기 느슨한 반면 범죄 공모는 매우 쉽다. 이 때문에 정부가 외부 인사 참여를 늘리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리 근절에 노력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바람에 일부는 여전히 ‘북마전’으로 불린다.

여기에서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교사 선발 위탁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방안도 학교들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구실로 외면하는 바람에 곱돌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채용 비리 단속 강화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공채 의무화 명분도 충분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폭행 피해 여교사 ‘신상 털기’ 제정신인가

‘신상 털기’는 ‘신상’(身)과 ‘털기’의 합성어로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시켜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설마를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물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 대한 신상 털기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까지도 마구잡이로 퍼 나르는 것은 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반인륜적 범죄라 할 것이다.

옛그제 경찰은 피해자 신상 털기를 시도한 일부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의 회원 등 네티즌 5명이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를 캐서 인터넷에 올리려다 영통한 사람의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피해를 안겨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어느 교사의 사진을 찾아 피해자라며 인터넷에 올렸지만 다른 교사의 사진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네티즌 5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교사는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공개하려는 이들의 정신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피해자 신상 정보를 캐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성폭행 못지않게 반인륜적이며 파렴치한 중범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일말백계로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신상 털기 같은 망나니짓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어느 인간 판사의 고백



한 윤 옥
광주지법 판사

의 삶을 이야기하시며 추기경님은 “부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간직한 법조인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흘렀고 그동안 저는 몇몇 직역을 거쳐 현재는 이 곳 광주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말씀에 감동하던 못했었던 청년은 어느새 한 사람의 직업인이자 한 아내의 남편,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 힘든 점이 있겠지만 판사라는 직업은 특히 끝없는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대립하는 주장 하나하나의 당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인지 무죄인지, 만약 유죄라면 어떠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인권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피고인에 의해 침해된 피해자의 인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판사의 인간적인 공감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판사에 의해 지켜져야만 하는 엄격한 법적 당위가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판사는 고뇌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들이 매달 한 재판부 당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백여 건 이상 새롭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외국에 비해 많은 수입에도 한 사건 한 사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열심히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하지만 판사 또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있고 때로는 자칫하기도 합니다.

이정난 지능의 컴퓨터가 인간 프로그래머의 바둑게임에서 승리하는 첨단 시대에 부족한 인간에 불과한 저 같은 판사가 이렇게 꾸역꾸역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엄격한 알고리즘의 결정체인 컴퓨터와 달리, 추기경님께서 십수년 전 말씀하셨던 ‘장발장의 가슴’으로 고뇌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파고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전남지역의 인간 판사들은 열심히 사건을 검토하고 때로는 잘못 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들의 노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아직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국민들이 법원의 재판을 온전히 신뢰하고 판사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법관’이라 불리며 지금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고 김홍섭 판사님이 재판 당시 하셨던 말씀을 약간 각색하여 실음으로써, 부족한 한 인간 판사로서의 제 변명을 감응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한계를 지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어 무척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판결이 곧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어진 절차와 증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검토하고 인간의 가슴으로 고뇌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제 판결에 불만이 있으신더라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 고

진도군의 환경정책, 자치단체 본보기 됐으면



손 영 호
진도부군수

기 질병은 물론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되는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진도군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두팔을 걷어 부쳤다. 진도를 찾는 관광객은 뛰어난 자연경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방문객들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군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을 ‘군민의 손으로’ 다시 살리고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월 지역별 테마가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위해 대대적인 주민주도형 ‘진도 환경을 리운동’을 시작했다. 읍·면, 마을, 어촌계 등으로 구분해 청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 시상금과 숙원사업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자발적인 환경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사계절 맞춤형 정화활동, 마을환경 지킴이, 청소 포인트제, 청년·부녀·동호회 1단계 1골목 길 담양제 등도 추진 중이다.

진도는 국내서 세 번째로 큰 섬이자 다

도해상국립공원 구역이기도 하다. 천혜의 바다경관과 그림처럼 펼쳐진 250여개 섬으로 이뤄져 있다. 당연히 해양환경 보호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해양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건조한 환경 정화선을 활용, 도서지역을 돌며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해안가 마을 폐어구, 어망 등을 정비·보관하는 시설도 구축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 폐기물 수매사업, 페스티로폼 감응처리 등 매년 10억원을 투입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햇빛과 바람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14년에는 사업비 92억을 들여 조도면 가사도에 국내 첫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기반한 ‘에너지 자립섬’을 조성했다. 에너지 자립섬은 스스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저장해 사용한다. 말 그대로 외부의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대한민국 최초 친환경 섬’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비 175억원 더 투자해 동거차·서거차 에너지 자립섬과 소규모 5개 에너지 자립섬 등을 2017년까

지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은 신선한 공기생산과 미세먼지농도를 약화,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무엇보다 훌륭한 자원이자. 숲 가꾸기 사업에도 매년 25억원을 투입, 숲의 연령과 상태를 산림여건에 따른 체계적인 숲 조성사업도 진행중이다.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채취 등 산림피해도 잇따르는 만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군 자생단체 회원과 공무원 합동단속도 벌이고 있다. ‘진도군 자생식물 및 자연성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후대에 줄 수 있는 유산 중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임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제다. 한반도 최서남단 작은 진도군의 환경보전 노력은 국가적,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행동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나날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버터플라이 효과’를 떠올려 본다. 진도군의 환경보호를 위한 절실한 노력의 날갯짓이 타 자치단체에 도미노 물결을 일으켜 우리나라 환경변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無 等 鼓

현행 사법제도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거나 법관이 오판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법관들이 오심했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았다. 법관이 공정성을 잃어 가해자를 봐주거나 형률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귀양 거거나 옥에 수감되는 현재로서는 상상기 힘든 형벌을 받았다.

조선 태조 때 나무를 운반하던 이부개란 자가 여중을 희롱하다가 여중이 수레에 깔려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 때 형조전서 문제종과 의랑 김구덕 등이

법조 비리

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모두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은’ 생색내기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빈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높여 나가는 추세이다. 이제 검사와 판사·변호사의 불법에 대해서는 사소한 경우라도 자격 박탈과 엄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국회가 국민을 위한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조 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나니, 이들이 앞장서면 수월하지 않을까?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